

월간 경실련

통권 170호 | 2019 07 08월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0주년 특집 - 경실련이 묻다
송월주 前 경실련 공동대표

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시사포커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12

30주년 특집
경실련이 묻다!

송월주 前 경실련 공동대표 인터뷰



COVER STORY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던 갑질, 폭언, 따돌림 등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힘든 직장 생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법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24

2019 재벌개혁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34

2019 부동산개혁
무주택 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38

시사포커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동승동 칼럼	10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30주년 특집	12 경실련이 묻다! 송월주 前 경실련 공동대표 인터뷰 김삼수 16 월간 경실련 30년 역사(4) 20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1993년,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2019 재벌개혁	24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올들의 만민공동회 오세형 27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중단해야 권오인
2019 부동산개혁	30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34 무주택 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김성달
시사포커스	38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서희원 42 북미 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관계 복원에 힘써야 조성훈 44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적극 나서라! 오세형
지역이야기	48 이번 휴가, 여기 어때요? 김포·대구·순천·이천여주·청주경실련
우리들이야기	52 현장스케치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정호철 55 인터뷰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을 만나다 이성윤 59 문화산책 9회 말 투아웃, 달빛요정이 쏘아 올린 역전만루홈런 정택수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63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64 경실련 일일보고 68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yunsc@ccej.or.kr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포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보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세계 100여 개 국가는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 자유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21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이 언론에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공개거부 사유를 넓게 정하여 오히려 비밀보호법이 되었다. 결국 이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가 등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없이 1987년 11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청주시의회가 최초로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자,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의 길을 열었다. 정보공개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 정보공개법안의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관료조직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다가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1996년 국회에 제출하여 법률로 제정되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법 제정에 적잖은 노력을 하였는데, 1993년에 정보공개법 제정청원, 1994년 행정정보공개지침(국무총리훈령288호)이 발표되자 상공

자원부와 재무부에 전기요금계산 근거자료, 마을버스 허가 지침, 장기원전입지의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전국 폐수 배출원 조사결과보고 등을 통해 처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개시 운동을 추진하였고, 1995년에 정보공개법 제정 토론회, 1996년에 정보공개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하였고, 1996년에 두 번째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을 청원하여 정보공개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경실련처럼 권력 감시를 주요 의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행정 정보가 실사구시적 현안 분석의 기초이고 동력이다. 그렇기에 경실련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보공개 청구와 거부의 줄다리기를 하였고, 정부의 공개거부에 수차례 소송으로 정보를 받아내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하였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시도별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 2019년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에 대한 산출근거 요구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근거 공개였다. 이 자료들은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이고 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정부는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64.8%로 설명하였으나 경실련이 조사해보니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토지 가격 비중으로 상업 및 아파트 토지가 상당 부분인데 너무 큰 차이에 정부의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시민들은 이 자료에 따라 60여 가지의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정부는 근거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불공평성 논란은 물론 정부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산정근거의 비공개 처분은 더 황당하다. 2005년 이전

까지는 표준건축비만 있었으나,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표준건축비를 임대주택용으로 정하고 새로 분양아파트용 ‘기본형 건축비’를 만들었다. 2005년 288만원이던 기본형건축비가 노무비와 자재비 인상을 명목으로 연평균 5%씩 올려 2019년에는 644만원으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표준건축비 342만원에 비하면 1.8배를 정부가 인상시킨 것이다. 건설현장에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70%이고, 철강 및 자재도 중국산 등 저가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건축비 인상의 요인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정부는 건축비를 계속 인상시켰다. 그 때문에 정부의 건축비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혹이 있었다. 올 3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할 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비공개했다. 경실련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도 기본형 건축비의 기준인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12년 건축비 연구용역으로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공사비지수만 적용해 매년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한 것이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에 기반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는 행정의 신뢰 및 정당성 향상과 부패 감소의 역할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으로 국민과 정보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공약했고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요지부동이다.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현금)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라 한다. 정보를 감출수록 의혹은 불어나고 불신은 커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개선을 진심으로 바란다. 🍷



30주년 특집 I

경실련이 묻다!



Interview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해요.
교류를 통해서 언어의 동질성을 찾고 이질화된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해 평화 정착에 나서자는 것이죠”

송월주(월주 스님) 前 경실련 공동대표

글·사진 김삼수 30주년사업국·기획연대국장 peace@ccej.or.kr

이번 호에서 경실련이 만난 분은 송월주(월주 스님) 前 공동대표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있던 영화사에서 월주 스님을 만났습니다.

월주 스님은 1989년 7월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1997년 7월까지 1·2·3·4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경실련통일협회 5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총무원장을 두 차례나 지낸 조계종단의 큰 어른이면서, 시민사회·남북관계·국제구호를 위한 활동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Q 경실련 활동에 함께 하신 계기나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김규칠 前 불교방송 사장, 박인제 변호사 등 경실련 중앙위원 불교신자들이 합의해서 나를 추천했고, 서경석 목사, 이형모 대표가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했어요. 나는 일언지하에 좋다고 했고,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어요. 경실련은 정치 투쟁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반독재 투쟁 이후 민주화가 되고, 몇몇 교수들이 모여 몇 달 동안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실련을 조직하되, 운동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합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나도 그런 취지에 동의해서 참여했고요. 거리에서 돌팔매질하고, 최루탄을 쓰고, 그것을 뒤집어쓰는 것은 종교인의 심성에 맞지 않아요.

당시 경실련이 다섯 번 모임을 하면 나는 세 번 이상을 참석하려고 노력했어요. 내로라하는 경제학자, 사회학자들과 함께하다 보니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죠. NGO 활동, 복지사업 등 불교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계기도 됐어요. 1991년에는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상임대표도 했고, 1994년 생긴 시민의신문 최초 발행인이기도 했어요. 1994년에는 다시 총무원장을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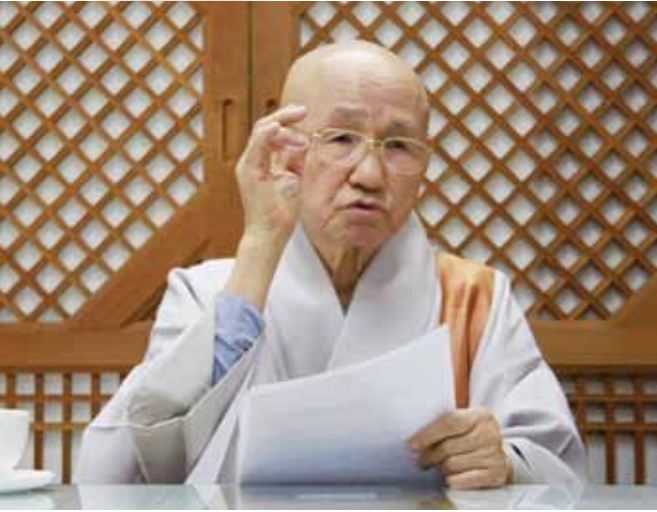
교계에서 내부 일에 전념해 달라는 정식 질문이 와서 1997년 초에 활동을 그만뒀어요. 그래도 애정이 많아요.

Q 창립 초기 경실련의 활동은 어땠나요?

A 경실련이 창립되고 일부 보수 인사나 정치인들은 경실련 활동이 진보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참여하는 동안 모든 사회 의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긍지를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한국은행이 독립해야 하고, 주택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어요.

경제정의·사회정의를 하려다 보니 손대야 할 곳이 너무 많았어요. 경실련이 많은 의제에 대응하다 보니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어요. 경실련이 시민운동의 효시적 역할을 했지만, 경실련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투쟁적으로 활동하는 후발 단체들의 영향력도 커졌고, 다른 단체들을 규합하는 역할도 한계에 직면했어요.

2000년 총선 당시 총선연대를 만들어 낙천낙선 운동이 이루어질 때, 경실련의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은 힘을 받지 못했어요. 낙천낙선 분위기가 뜨면서 나는 후보자들의 과거 잘잘못을 드러내 유권자가



판단하게 하고 공정선거가 되도록 해야 하지,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헌법의 하위법인 선거법이 잘못됐어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위법인 선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강했어요. 공선협도 그렇고, 많은 단체가 낙천낙선운동에 나섰어요. 결국 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후보자정보공개운동 등 경실련의 주장이 옳았고, 당시 낙천낙선운동에 앞장서지 않은 것은 잘한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경실련 주요 임원들이 정부에 입각하거나 정당에 붙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선명성이 훼손됐어요. 시민운동·NGO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익히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정치입문을 위한 발판으로 경실련을 이용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실련이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였어요. 정치권에 나가는 것도 시민운동·NGO 활동을 한 사람은 일정 기간 쉬었다가 가야 해요. 정당에서는 전문가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모두 끌어들이는 상황이

었어요. 당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시민운동을 한 사람들, 유권자 운동을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민운동을 하려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경실련이 초기에 선도적이고, 선각적인 활동으로 십수 년 동안 큰 역할을 했어요. 전에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명한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Q 요즘 정치권,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30년 전과 한국사회가 변했나요?

A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과 악담, 조롱에 하후하박도 넘쳐요.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의 감성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예전보다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은 발전한 것 같은데, 도덕적인 것은 오히려 퇴보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당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않는 유권자들의 각성이 필요해요.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대결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도록 해야 해요.

Q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는 어떤가요?

A 경실련통일협회가 남북문제에도 관여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했어요. 북한을 10여 번 다녀온 것 같아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선언 후에 이산가족이 최초로 8월에 만났어요. 11월에 2차 상봉을 하고, 2001년에는 2월에 한번 밖에 못 만났어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산가족이 천만 명이라는데, 다들 노쇠해서 몇 년 지나면 다 돌아가시니 계속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북측에서 자꾸 그런 말 하면 스님은 내일 여기 못 있다고 했어요. 북한의 10만 명이 동원된 카드섹션 아리랑 공연도 마찬가지로였어요. 공연 자체가 체제선전이에요. 체제에 익숙한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기 충분했어요. 처음 공연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라고 말했더니 북측에서 말은 안했어요. 서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을 할 때부터 우리가 온건하게 접근해야 하고, 북쪽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폐쇄적이거나 갈등을 부추겨서도 안 돼요.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해요. 교류를 통해서 언어의 동질성을 찾고, 이질화된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해 평화정착에 나서자는 것이죠. 6·15선언도 하고, 평화변영정책도 펼쳤지만,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해오고 있죠. 봄바람에 외투를 벗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갑옷을 입었어요. 일부에서는 자기방어용일 뿐 남한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요. 내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비판하고 북한에게 속았다는 말을 몇 번 했더니, 남한 내부에서도 비난하고 북한에서는 방북 초청장도 안 나와요. 김대중 정부는 6·15선언 이후 전쟁은 없다고 했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연평 해전이 벌어졌어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임기를 불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의 10·4선언은 문제가 많았어요. 이후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돼 버렸지요.

그래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해요. 북을 도와주되 투명하게 도와줘야죠.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국제구호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북한의 경우 산모들이 영양섭취를 못하니까 젖이 마르

고, 어린아이들 영양결핍도 심각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되 고통 받는 사람들을 투명하게 도와줘야 해요. 대북 지원이 무기화되거나 독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용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해요.

Q **끝으로 경실련 또는 시민사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불경에 나오는 석가족 학살 사건을 보면, 가비라성의 이웃나라인 꼬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은 석가족 공주와 혼인하기를 원해요. 석가족은 파세나디왕을 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공주를 보내는 대신 마하나마왕과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공주라고 하고 보내요. 파세나디왕은 그 아이를 왕비로 삼았고 비타투바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비타투바가 16살이 되던 해 마하나마왕과 석가족 공주들을 만나기 위해 가비라성에 방문했다가 노예 계집의 아들이란 소리를 듣게 돼요. 이에 분노하여 비타투바가 석가족의 씨족을 모두 말살했어요. 야사이기는 하지만, 수만 명의 비타투바 군대가 가비라성을 점령했을 때, 마하나마왕은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서 떠오를 때까지만 도살을 멈춰달라고 했고, 비타투바는 이를 받아들여요. 연못에 들어간 마하나마왕은 자신의 상투 머리를 큰 나무에 묶어 떠오르지 못하게 했어요. 왕의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 동안 석가족 사람들은 많이 도망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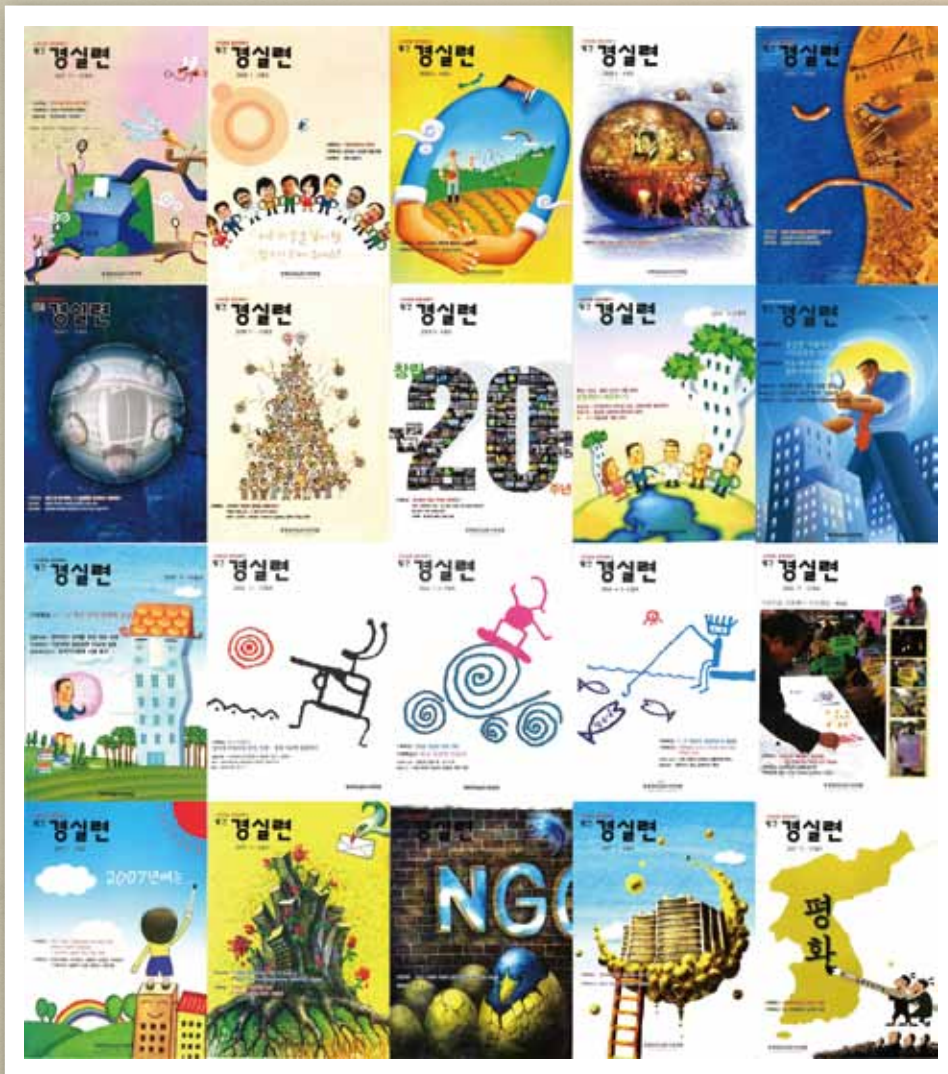
자기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 석가족 일화처럼 그런 심정으로 남북 관계도 다가가야 해요. 사회정의·분배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NGO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월간 경실련 30년 역사(4)

2005~2009년

이번 호에서는 경실련이 2005년부터 20주년을 맞았던 2009년까지 발행한 월간 경실련을 소개해드립니다. 20주년도 어느덧 10년 전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글·사진 경실련 편집부



2005년



2005년 3·4월호

판교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2005년, 열심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5년 6·7월호

판교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몰랐을까요? 그렇게 집값은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졌습니다.



2005년 9·10월호

2005년은 부동산 특집입니다. 지금도 논란인 신도시 개발은 그때도 지금도 달라진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도시인가요?

2006년



2006년 1·2·3월호

2006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 캠페인 홍보물입니다. 경실련은 창립 초기부터 공명선거, 정책선거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2006년 7·8월호

딱지 붙이는 사회, 지금 더 외닿는 말입니다. 혐오 사회라는 말이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포용과 대화는 불가능한 걸까요?



2006년 9·10월호

민생국회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말인가 봅니다. 17대 국회에서 13년이 지난 20대 국회도 민생이 뒷전인 건 변하지 않았네요.



2006년 11·12월호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 특집입니다. 경실련이 10만 서포터즈를 목표로 진행했던 캠페인이었는데요, 아파트값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2007년



2007년 3·4월호

지금도 달팽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되어도 남은 장사 같은 미미한 과징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5·6월호

시민과 더 친근한 경실련이 되길 바라는 회원의 인터뷰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경실련이 시민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가겠습니다.



2007년 9·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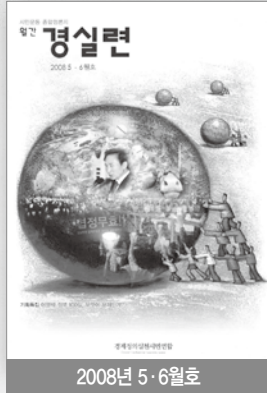
이 당시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담문제로도 이러한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2007년 11·12월호

여러분과 통하는 후보는 누구인가요? 선거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경실련의 후보 선택 도움미는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2008년



2008년은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 낸 '이분' 특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지는 다 아시죠?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강남 부동산분사, 소위 강남 부자들만 임명했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안봐도 뻔하겠죠.



요즘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뜨거운 이슈인데요, 찬반이 팽팽한 자사고의 시각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명박상생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으로 나왔고, 정부는 광화문 앞을 컨테이너로 막아버렸죠.

2009년



창립 20주년 어느덧 10년이 더 지나서 올해는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경실련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20주년 홈커밍데이가 열렸습니다. 올해 30주년 홈커밍데에도 참석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글·사진 경실련 편집부



● 1990년 4월 25일 열린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공청회 모습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금융실명제.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30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하며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발표가 있기까지 경실련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당시부터 금융가명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실명제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에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서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경실련의 발기선언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정경 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극심한 소득 격차, 불공정한 노사 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해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사치와 향락, 공해 등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금융실명제는 1982년 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정치권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도입은 조금씩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권한 노태우 정권은 1990년 4월 5일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실명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습니다. 운동을 시작으로 1990년 4월 25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대강당에서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라는 주제로 공



● 1992년 7월 18일 열린 금융실명제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대회 모습

청회를 개최합니다. 당시 발제문(최광 경실련 정책연구위원)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사회경제적 의의, 도입의 정치경제학, 실명제 찬반논의의 핵심, 금융실명제 실시의 기본 전제, 추진방법, 조속한 실시촉구의 이유,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골자로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경실련은 성명, 기자회견, 시민대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1990년부터 4년간 이어진 금융실명제 도입 운동의 결과,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을 발표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금

정책대안특집
다시 금융실명제 실시를 촉구한다
 금융실명제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반면에 기득권층의 이해에 밀려 반복되고 한 금융실명제, 역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금융실명제 실시가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구체적 방도를 살펴본다.

금융실명제의 정치경제학 중앙관리경제질서가 낳은 사생아 이진순 144
부작용 최소화 방안 국민 놀라지 않게 해야 성공한다 최병근 151
부작용 논리의 허구 기득권층의 거짓 우려 이필상 154
기대효과 경제 되살리고 밀실정치 없애는 만병통치약 양혁승 158
실사논의의 부침과정 '검은돈' 황포에 개혁요구 묵살 고은택 162

● 1992년 경제정의 11·12월호 금융실명제 특집



●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도입 자축연 모습



● 1993년 금융실명제 평가 토론회 모습

금융실명제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당시 성명에는 “오늘 실명제 실시 발표는 기득권층에 대한 온 국민의 승리로서 우리는 이 감격을 전체 국민과 함께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운동성과의 기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금융실명제 도입은 기득권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후, 가명으로 이루어지던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줄어드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이후에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더 나은 금융실명제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